

의안 번호	2337	울산광역시 중구 폭염·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제출 일자 : 2024. 9. 30.(월)
- 제출 자 : 문희성 의원 외 9명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9. 30.(월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10. 14.(월)

2. 제안이유

-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폭염과 한파 등 기상이변이 발생함에 따라 폭염과 한파로부터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,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·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폭염·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(안 제4조)
- 저감시설 설치(안 제6조)
- 폭염·한파 취약계층 보호(안 제8조)
- 교육 및 홍보(안 제9조)
-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4. 근거법규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조

5. 검토의견

- 산업화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발달하면서 지구 온난화, 엘니뇨 현상, 열섬 현상 등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 등 기상이변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, 폭염과 한파로 인하여 사람들의 인체에 대한 피해는 물론 수생 생태계 변화와 함께 농작물 및 산업 피해 등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.
- 최근 들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정책 추진 등 다양한 활동들이 추진 되고 있으며, 우리 구에서도 폭염과 한파 등 각종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폭염과 이상 한파로부터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폭염·한파 저감시설 설치, 취약계층 보호 등 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, 폭염·한파로부터의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제반 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「자연재해대책법」

제3조(책무)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, 그 시행을 위한 최 대한의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21.>

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(이하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· 5. (생략)

6. 폭염대책

가. 폭염피해 예방대책

나.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

다. 각 유관기관 지원·협조 체제 구축

라.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
7. 한파대책

가. 한파피해 예방대책

나.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

다. 각 유관기관 지원·협조 체제 구축

라.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
8.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

가.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

나. 재해정보 관리·전달 체계 구축

다.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

라. 비상대처계획 수립

9.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, 점검 방법, 점검 결과의 기록·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시장[특별자치시장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(이하 “행정시장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, 주민 교육·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⑥ 국민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·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,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·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